

학부모 청렴교육(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안내)

1. 법률 적용 대상

가. 적용 대상 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나.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2. 부정청탁의 금지

□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5개로 구체화

□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규정(7개)
-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로 제재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청탁 15개 금지 행위유형 자세히 보기

1. 인가·허가 등 업무 처리

인가·허가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행정처분·행벌부과 감경·면제

인가·허가의 취소, 조세, 과태료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행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공공기관 의사결정 참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탈락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별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특정인 계약 선정·탈락에 개입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탈락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투자 등에 개입

보조금·장려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출자 등을 하도록 개입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등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사용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10. 학교 입학·성적 등 처리·조작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징병검사, 부대 배속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행정지도·단속 등 결과 조작·위법사항 묵인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그 결과를 조작 또는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개입

사건의 수사·재판 등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1번~14번 유형에 대한 지위·권한 남용

위 1번부터 14번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들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3. 금품등의 수수 금지

가. 공직자들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품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적 이익을 주는 것이나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공직자등(배우자 포함)에게 제공하거나 수수 금지

☐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
-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이 이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을 제재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 표시한 경우 제외

● 공직자등과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 사유

-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
 - 일정한 범위 안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 사유에 해당

● 수수 금지되는 금품등



4. 징계 및 벌칙

- ☐ 의무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방안을 마련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과태료 및 형벌 등 구체화
- ☐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거나 그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

- ☐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
- ☐ 위반행위별 제재 수준
- ☐ 부정청탁 금지

구 성 요 건			제재 수준
행위 주체		유 형	
이해당사자		▸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u>제재 없음</u>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3자	사인	▸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u>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u>
	공직자등	▸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u>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u>
공직자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처리	<u>2년 이하의 징역,</u> <u>2천만원 이하의 벌금</u>

○ 금품 등 수수 금지

구 성 요 건			제재 수준
직무 관련성	유 형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과 무관	▸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직무와 관련	▸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기타	▸ 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1.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943(2016.4.12.) ,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2208(2016.4.20.)
2. 교육 목적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6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내용을 홍보하고자 함
3. 교육 방법: 각급 학교에서는 행동강령책임관(교감)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대한 사항을 소속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상반기 1회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고
4. 법률 적용 대상 기관 : 모든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국공사립), 언론사
5. 적용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에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6. 촛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을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방침

가.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

나. 불법찬조금은 왜 근절되어야 하나?

불법찬조금은 촛지와 더불어 학교에 대한 “사회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학교경영의 투명성과 교육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다. 촛지 수수 현황

매년 새 학기 및 스승의 날을 전후하여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 증대, 자녀의 진학상담 등의 명분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 등에게 촛지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라. 촛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이 조금이라도 유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로 촛지를 제공하여 있으며,
- 촛지를 받는 교사는 학부모들의 감사의 표시로 받아들여 관행적, 무감각적으로 수수하는 경향이 있으며,
- 촛지수수는 개별적,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 촛지는 왜 근절되어야 하나?

-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며, 촛지가 근절되어야 학부모나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고 투명한 교육풍토를 조성할 수 있으며,
- 일부 몰지각한 교사의 촛지수수 행위로 교단에서 보람을 느끼며 헌신적으로 교육하는 대부분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결국 아이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 교육현장이 황폐화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바. 촛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적발 시 처분은 어떻게 되나?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100만원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 2) 교육공무원이 불법찬조금 모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문책
- 3) 학교장이 촌지수수나 불법찬조금 모금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4) 촌지수수는 받은 사람은 물론 건네는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 홈페이지(www.jbe.go.kr)/전자민원/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 불법찬조금신고
- 촌지수수 신고(☎ 063-239-3300 교원인사과)
- 불법찬조금 신고(☎ 063-239-3576 예산과)